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mhcho@kiep.go.kr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ckbae@kiep.go.kr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김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계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
 -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둔화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 요인은 개도국의 소비시장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임.
- ▶ 주요 지역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미중 통상분쟁 등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
 - 북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
 - 중국 수입시장에서 북미 지역 국가의 비중이 감소
 -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
-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 GVC가 확장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
 -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계 GVC 평균 참여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임.

- 최근 세계 각국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상대국에게 일방적 통상정책을 사용
 -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32조를 근거로 수입 관세를 높이고 수량을 제한한 바 있으며, 미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타결
 - 유럽 역시 유럽 우선주의(European First)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으며, 인도와 터키 등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등을 요구
-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무역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얹혀 있는 세계 무역구조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일방적 통상정책은 세계 무역이라는 다자체제 안에서 자국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교역 상대국의 비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임.

- 기존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를 전제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이익을 나눠 갖도록 설계되었음.
- 2000년대 초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세계로 확산된 이유는 자유무역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이익 분배라는 가치가 공유되었기 때문임.

● 이번 연구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확대와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식별하고 향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과거보다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구체적인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무역비용 증가와 무역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와 정책 시사점 제공
- 특히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따라 변하는 무역비용과 세계 무역구조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 및 특성과 함께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①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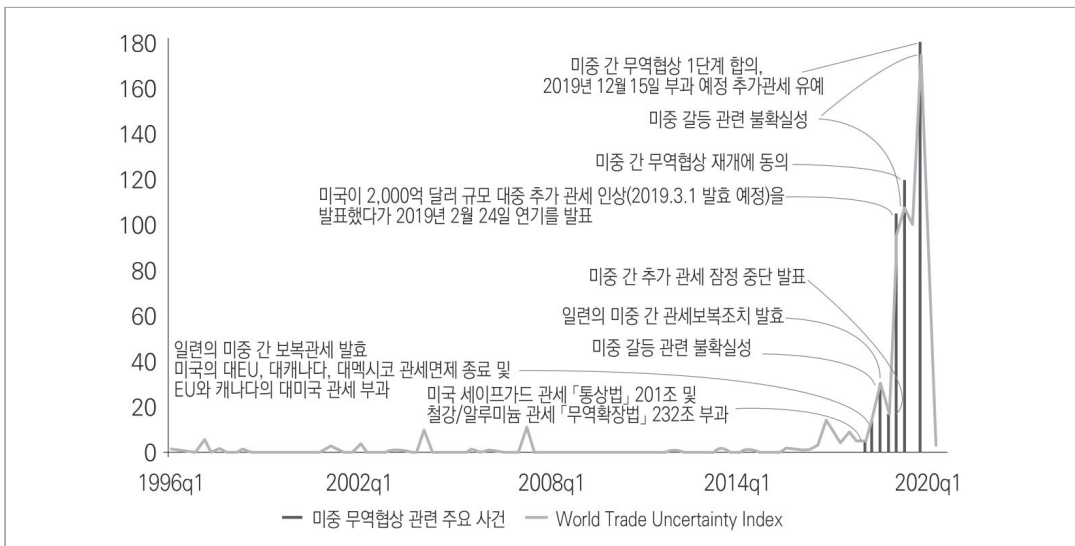
● 국제통상환경에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비용의 상승을 초래

- 본 연구에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수준을 보여주는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WTUI: World Trade Uncertainty Index)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망

● 2016년 4/4분기 이전까지는 WTUI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4/4분기부터 WTUI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

-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보복 조치를 취할 때마다 WTUI가 크게 증가
- 1996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의 WTUI 평균값은 0.89로 낮았으나 2016년 4/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까지의 동 값은 45.86 급등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극에 달하던 2019년 1/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까지의 WTUI 평균값은 115.42임.

그림 1.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WTUI)



자료: The World Uncertainty Index의 자료 인용(검색일: 2020. 7. 29).

②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 미국의 관세율은 2008~16년 동안 약 2.8%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16~18년 동안 연평균 6.9% 증가하여 2018년 3.19%를 기록

- 미국의 관세율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취해진 「통상법」 201조 및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 미국은 2002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통상법」 201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최근 30년 가깝게 사용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더해 자동차 및 부품, 우라늄 광석 및 관련 제품, 티타늄 스펀지, 방향성 전기 강판, 이동식 크레인, 바나듐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 최근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4차에 걸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중 통상분쟁이 발생
 - 미중 간의 대립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2019년 10월) 및 서명(2020년 1월)으로 다소 진정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책임 공방과 홍콩 보안법 문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다수의 이슈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입을 규제

- 2000~19년 동안 미국이 취한 SPS, TBT, 무역구제조치 중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지고 있음.
- 미국은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가 개시되면 긍정(affirmative)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사례 증가
 -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및 특수한 시장상황(PMS)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은 최근 WTO의 기능 약화 및 WTO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지역무역협정과 양자 통상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미국과 WTO 간의 불협화음이 증가

- 2020년 11월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WTO 탈퇴 우려는 줄었으나, 향후 WTO 체제의 개선과 다자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서도 막강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협정 탈퇴나 협정의 개정 요구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TPP 협정에서 탈퇴
 - NA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매우 공세적인 협상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무역 자유화, 지적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촉진, 환율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책임 메커니즘 도입, 노동 및 환경 의무 강화, 농업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개선, 상품 수출입 절차 개선, 북미 지역의 섬유·의류 생산 증대 등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USMCA를 타결

③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 Global Trade Alert는 2008년 이래로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 저해 조치 및 자유화 조치를 조사하여 발표
 - 국제적인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및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무역 저해 조치와 자유화 조치를 집계·발표
- Global Trade Alert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 무역 관련 신규 개입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 저해 조치는 2009년에는 106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812건으로 크게 증가
 - 2020년 현재 878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동 자료가 조사·집계된 전반기(2009~14년) 기간보다 후반기(2015~20년) 기간에 들어 신규 무역 저해 조치의 실행 건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국별 무역 저해 및 자유화 조치 현황을 보면 2009~20년 동안 무역 저해 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국가는 중국(6,85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독일(6,806건), 미국(6,504건), 이탈리아(6,454건), 프랑스(6,289건), 영국(6,014건), 한국(5,925건), 일본(5,839건) 등의 순서로 무역 제한 조치가 많이 시행
 - 무역 자유화 조치의 경우 미국(3,388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독일(3,210건), 프랑스(2,983건), 이탈리아(2,979건), 인도(2,813건), 일본(2,810건), 한국(2,783건), 영국(2,774건), 중국(2,749건) 등의 순서임.
 - 미국과 EU 주요국, 한국, 일본 등은 무역 제한 조치를 많이 시행하면서도 무역 자유화 조치를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
- 품목별 무역 저해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철·금속 제품류(철·강철 제품(1위), 철·강철 기초재료(4위), 기타 금속 제품(3위, 33위))에 대해 무역 저해 조치가 가장 많이 시행
 -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기기류(자동차 제품 및 부품(2위), 기타 운송기기(14위, 27위, 30위, 51위))와 화학제품류(5위, 7위, 8위, 16위, 22위, 28위, 55위), 전기 에너지(6위), 기계류(9위, 10위, 11위, 13위, 15위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12위, 19위, 21위, 23위 등) 등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도 여타 품목에 비해 많이 취해지고 있음.

그림 2. 국가별 무역 저해 조치 및 자유화 조치 현황



무역 저해 조치						무역 자유화 조치					
순위	국가	개입건수	순위	국가	개입건수	순위	국가	개입건수	순위	국가	개입건수
1	중국	6,851	11	인도	5,492	1	미국	3,388	11	네덜란드	2,616
2	독일	6,806	12	스페인	5,476	2	독일	3,210	12	스페인	2,573
3	미국	6,504	13	태국	5,211	3	프랑스	2,983	13	벨기에	2,508
4	이탈리아	6,454	14	벨기에	5,186	4	이탈리아	2,979	14	캐나다	2,479
5	프랑스	6,289	15	스웨덴	4,936	5	인도	2,813	15	말레이시아	2,452
6	영국	6,014	16	브라질	4,732	6	일본	2,810	16	멕시코	2,338
7	한국	5,925	17	말레이시아	4,680	7	한국	2,783	17	인도네시아	2,311
8	일본	5,839	18	멕시코	4,644	8	영국	2,774	18	브라질	2,300
9	캐나다	5,622	19	스위스	4,615	9	중국	2,749	19	홍콩	2,262
10	네덜란드	5,541	20	오스트리아	4,525	10	태국	2,637	20	스위스	2,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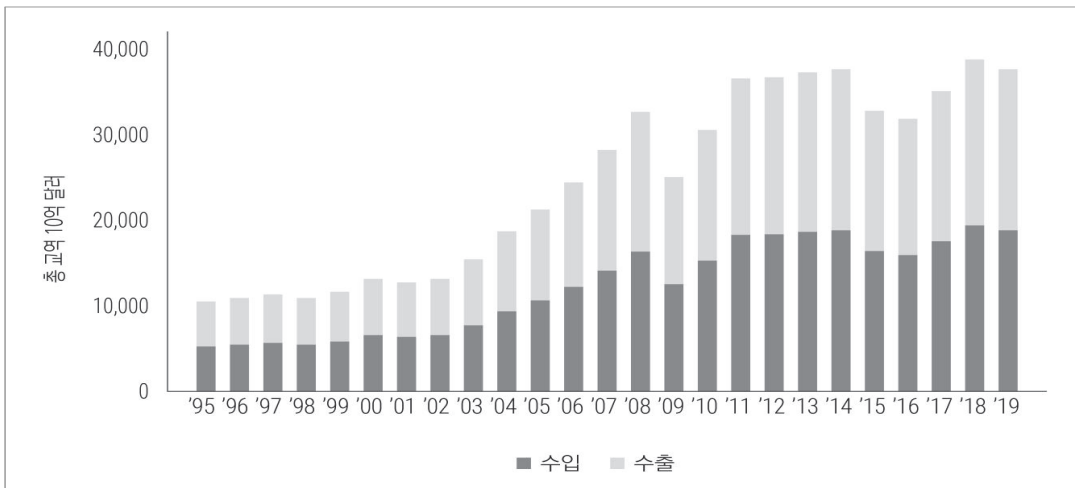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음영이 짙을수록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Alert 웹사이트(검색일: 2020. 8. 24).

2)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계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

-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교역이 연평균 9% 성장
 -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계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음.
-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은 연평균 4%(2009~19년) 성장하는 등 교역증가율이 둔화
 - 선진국의 교역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8% 성장했으나 그 후 연평균 3% 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교역이 연평균 14% 성장했으나 그 후 연평균 6% 성장하는 데 그침.

그림 3. 전 세계 교역 추이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이며 상품 기준임.

자료: IMF D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n/data>(검색일: 2020.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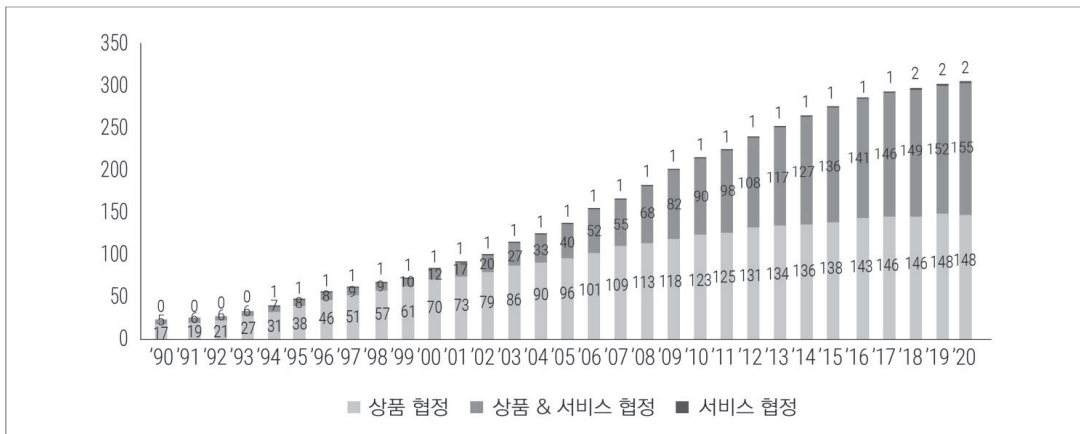
①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요인

● 지난 20년간 세계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글로벌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을 꼽을 수 있음.

- 지난 20여 년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살펴보면, 지난 EC 조약으로부터 시작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¹⁾은 1990년대에 들어 다자체제의 주도 국가인 미국이 RTA에 참여(NAFTA 체결)하고 WTO 체제하에서도 RTA가 예외로 인정되면서 세계적으로 RTA가 확산되기 시작
- 1990년대까지의 RTA는 상품협정이 중심을 이루어 왔으나,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현재까지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RTA의 발효 건수는 연평균 3.8% 증가한 반면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의 발효 건수는 연평균 13.6% 증가하는 등 상품협정과 함께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수준 높은 RTA 체결이 크게 증가
 -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도 크게 기여

1)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

그림 4. 전 세계 RTA 현황



주: 2020년 8월 14일 현재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 기준 현황임.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검색일: 2020. 7. 2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정체·둔화되고 있으며 세계교역 증가세 또한 최근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이 개도국의 소비시장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 감소와 AI, IT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편되고 있음.
- 개도국이 단순히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 중간 거점이 아닌 최종 소비지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해외투자 유형이 변화하고, 이는 무역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개도국에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형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최근에는 수출 대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피하거나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시장 지향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
- 개도국의 자급률 증가 역시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산업고도화 정책을 통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있음.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자급률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 무역구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기술의 발전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수행하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되어, 고임금 지역에서 저숙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리쇼어링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생산 단계를 타국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

②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 북미(미국, 캐나다) 시장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전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이후 아세안+인도로 표기)와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늘었음을 확인
 - 특히 북미 수입시장에서 30% 이상(2019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의복과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지난 5년간 각각 약 5%, 7% 감소한 반면 아세안+인도의 비중은 약 4% 증가
 - 전반적으로 북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통상분쟁 등의 여파로 전 산업에 걸쳐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제조업에 걸쳐 아세안+인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증가
-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중 통상분쟁 등의 여파로 인해 북미 지역 국가의 비중은 전 산업에 걸쳐 감소
 - 농림수산업의 경우 북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남미 지역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4% 이상 증가
 - 수송기기의 경우 북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10% 감소한 반면 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6% 이상 증가
 - 전기전자와 기계산업의 경우 한국의 비중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약 3% 하락
- 아세안+인도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역내 교류가 많은 편임.
 - 여타 아세안 국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아세안+인도 수입시장에서 광업을 제외하고 적게는 농림수산업에서 40%, 많게는 기계산업에서 68%를 차지
 -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섬유 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과 기계 산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지난 5년간 3% 이상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아세안+인도 시장의 기계와 수송기기 산업에서 수입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13%)을 유지
- 2019년 유럽의 수입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5년간 전기전자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 증가
 - 유럽의 수송기기 수입시장에서 북미 수입 비중이 지난 5년간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약 9.4%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비중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2019년 중남미의 수입시장을 보면, 역내 교류가 많은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중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50% 이상의 비율을 기록
- 기계산업 역시 중국 의존도가 25% 이상이며 지난 5년 사이에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약 3% 증가
- 한국의 경우 수송기기, 전자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 감소하는 모습

③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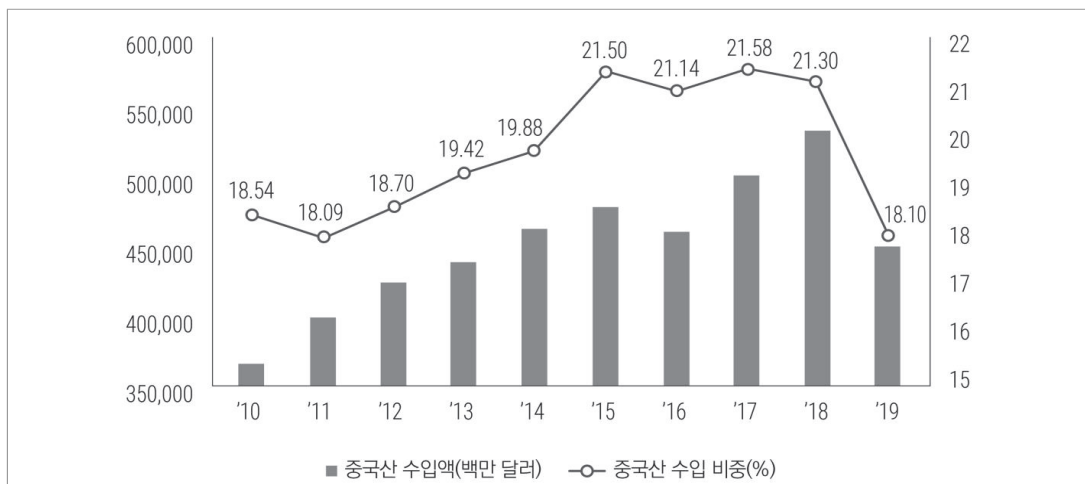
- 북미 지역과 중국 수입시장의 지난 5년간 국가별(혹은 지역별) ·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북미 수입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북미 지역 제품의 비중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북미 시장에서는 아세안+인도 비중은 증가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이 자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

그림 5.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동향과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0. 11.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Romalis(2007)와 Russ and Swenson(2019)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
 -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여기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사용
- 분석결과를 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전환이 발생
 - 품목 특성별로 특이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품목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본재, 소비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글로벌 가치사슬 및 교역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던 중간재의 경우 전체 품목과 유사하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3)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① 산업연관관계가 반영된 이론무역모델 구축과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상당치 추정

●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추적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무역모델을 구축함.

- 세계경제가 다국가·다산업으로 구성되고 각국 경제에는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최종재와 중간재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며,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을 통해 국가와 산업이 서로 얽혀 있는 국제무역 이론모델을 구축함.
 - Antras and Chor(2018)를 기초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이론모델을 확장함.
- 구축된 이론모델을 통해 총수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이 추적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정보도 추출 가능함.
 - 부가가치 수출 분해는 Koopman *et al.*(2014)을 참고함.

● 무역 불확실성 지수의 관세상당치 추정

-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리변수로서 무역 불확실성 지수(Trade Uncertainty Index)를 선택하고 중력모형을 토대로 PPML 추정법을 적용함.
 - PPML 추정법은 무역이 영(0)의 값을 가질 때도 추정 가능하고 이분산성에도 강건한 결과 도출
- 미국의 최근 5년간 무역 불확실성 지수 평균의 관세상당치를 도출하면 약 10.21%에 해당함.

② 반사실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 분석방법과 시나리오

-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이론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ADB MRIO)를 연계하고 관세상당치 추정값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한 후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을 채택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실시함.
 - 반사실적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Dekle *et al.*(2008), Caliendo and Parro(2015), Antras and Chor(2018) 등을 참고함.
 -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07~19년 63개국 35개 산업을 포함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와 1995~2011년 41개국 35개 산업을 포함하는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임.
-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의 증가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함.
 - 미국발 충격: 미국을 교역 상대국으로 한 모든 국가의 무역비용 10% 증가
 - 글로벌 충격: 모든 국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비용 10% 증가(자국 무역비용의 변화 없음 가정)

●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 미국발 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는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 감소에 기여
 -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의 감소는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하락이 대부분 설명함.
 - 세계 수출액의 감소에 따라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3국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증가할 때 북미 3국을 제외한 한중일, 유럽권 등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감소함.
 - 미국발 충격에 따라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
 - 북미 3국 간 부가가치 수출 구조 변화만을 놓고 보면,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GVC 평균 참여도는 증가함.
 - 북미 3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GVC 참여도 증가에 따른 결과임.

●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 미국발 충격처럼 글로벌 충격은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을 낮추지만, 그 영향력은 글로벌 충격이 더 강함.

- 미국발 충격이 북미 3국을 중심으로 파급되는 반면 글로벌 충격은 세계 모든 국가간 교역에도 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임.
- 글로벌 충격은 모든 권역의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발 충격에 따른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감소는 북미 3국에 집중됨.
- 권역별 최종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므로 글로벌 충격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변화함.
 -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과 달리 한중일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낮추지만, 한중일을 제외한 EU 국가간, 북미 3국 간, ASIA 국가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높임.
- 미국발 충격과 달리 글로벌 충격은 세계 GVC 평균 참여도를 낮춤.
 - 글로벌 충격에 따른 GVC 지표 변화를 확인해 보면 한국,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GVC 참여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 GVC가 확장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함.**
 -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계 GVC 평균 참여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3. 정책 제언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통상분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세계교역의 둔화는 당분간 불가피**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포함한 세계 무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
-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와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덜 효율적이더라도 보다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선진국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 보건의약품, 보건 관련 상품, 의료장비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높은 의존도를 확인하였으며,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

- 향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때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성 제고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은 지역 가치사슬의 부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니어쇼어링이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

- 최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은 생산시설의 동남아 이전을 결정했고, 애플도 아이폰 생산 일부를 인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
-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정 국가에 편중하여 진출해 있는 해외 진출기업의 제3국 이전을 유도하는 소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방안을 병행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아시아 지역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 회원국간 공동의 노력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 수행**

- RCEP은 역내 시장접근 개선과 규범의 조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 가치사슬로서 RCEP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은 회원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함.
- 역내 안정적 소비시장의 존재가 지역 가치사슬로서 RCEP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
 - RCEP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중국 역할론을 RCEP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임.
 - 네트워크로서 RCEP의 비교우위는 역외를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과도한 대립으로 RCEP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회원국간 인식의 공유에도 힘써야 할 것임.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 **우리나라 수출은 2017년 5,737억 달러에서 2018년 6,05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

- 반도체 수출이 이른바 슈퍼사이클의 상승기류를 타면서 2016년 622억 달러에서 2017년 979억 달러, 2018년 1,267억 달러로 급성장한 것이 주된 요인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 역시 2016년 12.6%에서 2018년에는 20.9%로 크게 증가
-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살펴보면, 2017년 4,758억 달러에서 2018년 4,785억 달러로 소폭 증가

-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 증가에 의해 가려졌을 뿐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수출증가 둔화세가 지속

●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 확산, GVC의 안정화 내지는 축소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무역증가 둔화와 궤를 같이함.

-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하에서 예전처럼 수출량 자체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량 증대에 초점을 맞춘 무역과 통상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임.
- 따라서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디지털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생산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

- 세계 경제질서가 특정 기술기반하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대단히 어려움.
- 통상정책의 과제로서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데 우리 경제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통상분쟁의 경우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기술패권 차원으로 치닫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임.
- 미국, 중국 그리고 소수 품목에 높은 교역 의존도를 가진 우리에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큰 위협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남방 · 신북방 정책을 통해 G2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주요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협정이 발효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효과가 오래 전에 실현되었을 수 있음.
 - 일방적 통상정책이 확산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소비시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MERCOSUR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체되어 있는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우즈베크, 조지아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예정인 국가들과는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음.
-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는 신흥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요구됨.
 - 신흥 개도국들의 경우 기존 무역협상에서 주된 관심사였던 상품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경제·산업 협력,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협상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국 맞춤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
- 일본 등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초기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임.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낮은 수준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개선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CPTPP 등 높은 수준의 메가 FTA 가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 향후 WTO의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중국,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개도국을 비롯하여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임.

-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 제도 개선 및 세부 분야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통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탬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노동, 환경과 같은 비교역적 이슈를 통상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시 필요

- 다자체제 내에서의 복수국 간 협정이나 복수국 간의 지역무역협정 논의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중견 통상 국가들과 공통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자협상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및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신속하면서도 전략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지난 2013년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가 조직·운영되면서 무역구제조치나 TBT, SPS 등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되었음.

- 향후 주요국의 경제·산업 정책 및 불합리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언제든지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세계 경기침체 지속과 함께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향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 기업 혹은 산업의 경쟁력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이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혹은 감소에는 무역전환효과가 존재하기에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자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속단할 수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우리 기업 혹은 정부에 대해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통상정책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무역수지 흑자 지속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무역구조 및 투자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무역 불균형과 관련한 대응논리를 사전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함.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

●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으로서 가격경쟁력 제고, 무역비용 감축 노력, 디지털 전환 대비가 중요

- 기술을 혁신하고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는 세계 생산과 수출의 감소를 동반
- 세계 수요가 위축될 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높은 가격경쟁력이 요구됨.
 -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격 대비 품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면 단위생산비용이 하락하므로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해당 중간재를 활용하는 국내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방적 통상정책의 수단과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기업의 대처가 중요

- 무역구조조치에 대비해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당국의 요청 시 행정업무에 협조하고 해당 조치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할 것임.

- 차별적 비관세조치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국내외 기업과 함께 대응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
-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차별적 비관세조치의 신규 도입 등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확대는 모두 기업의 무역비용을 높이므로 기업 수준에서 무역비용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감축 노력 필요

●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대응

- 코로나19 장기화는 디지털 비대면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국경 폐쇄 지속, 해외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별 방역당국의 방침이 지속되면,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무역이 둔화되어 각국 정부가 일방적 통상정책을 펼 유인이 높아짐.
- 디지털 전환이 GVC 재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생산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판매나 수출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가 초기 고정비용, 재고 유지비용, 상품 배송의 추적비용,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임.
-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디지털 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기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사슬의 주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생산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고 수출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KIEP